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8482
----------	------

제안연월일 : 2025. 2.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409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24.7.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원회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2.)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548호)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2024.7.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원회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2.)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919호)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2024.7.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원회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2.)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476호)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2025.1.1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21.)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2.)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503호)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25.1.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21.)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2.)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가.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2.)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2.26.)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4제3항 중 “권리구제를”을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로,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를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 ② (생략)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권리 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